

# AI 맞춤형 인재 양성 나선다... 교육부, 'AI 중점학교' 운영

교육부, 1141개교에 385억 지원  
AI 수업 시간 최대 2배로 확대  
우수 수업 사례 교육청과 공유

〈교육부 선정 지역별 '인공지능 중점학교'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	78	19	21	36	13	6	7	21	98	15	22	53	51	14	44	29	3	530
중	46	4	32	37	7	7	4	10	46	4	5	33	15	10	15	4	-	279
고	55	17	7	34	7	11	5	11	56	7	11	27	13	10	24	16	8	319
특수	3	4	-	-	-	-	-	-	-	-	2	-	2	-	2	-	-	13

/교육부

교육부가 초·중등학교에서 인공지능(AI)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인공지능 관련 수업 확대와 교과 융합 교육, AI 윤리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99-1)'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2025년 11월 10일)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정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

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중점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내 인공지능 관련 교과 수업 확대 ▲국어·수학·과학·사회 등 교과와 연계한 융합 교육과정 운영 ▲인공지능 윤리 교육 강화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활용하는 학교 환경 조성 등 네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수업 시간도 확대된다. 초등학교는 기존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으로, 중학교는 68시간에서 102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며 고등학교는 매 학기 인공지능 관련 과목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번에 선정된 인공지능 중점학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자체 선정한 1141개교다. 선정 학교는 2026년 3월부터 3년간 운영되며 인공지능 교육과정 운영, 교원 전문성 강화, 학생 동아리와

체험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한 거점학교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특별교부금 총 38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학교급과 운영 유형 등을 고려해 학교별로 달라지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예산이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 교육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6년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

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확대해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우수 수업 사례와 운영 성과를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인공지능 교육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연수와 인공지능 교육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최고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중점학교는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을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모든 학생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역량과 윤리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교육계 소통 돕는 '행정체제통합지원단' 출범

교육부, 행정 개편 실행방안 마련  
통합지역 교육지원 특례 검토 추진

교육부(장관 최고진)는 광역 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 설치의 '교육행정체제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령 제292호)'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교육 행정체제 통합지원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

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광역시와 도가 통합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교육청의 기구·정원·인사와 통합 비용 지원 등 행정·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통합 지역의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방안 등 다양한 특례 발굴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과의 정례적인 소통 통로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 연구와 조사도 추진할 수 있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통합지원팀의 2개 팀을 둔다. 기획총괄팀은 통합 관련 방안 수립 및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팀은 통합 지역의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 등을 전담한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체제 통합이 추진돼 지역교육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최고진 교육부 장관은 "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교육계와 긴밀히 협력해 교육 행정체제 통합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 "어린이집 노후 CCTV 교체하세요"

설치비·유지관리비 지원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노후 폐쇄회로(CC)TV 교체 지원에 나선다. 시는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어린이집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필수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및 노후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CCTV의 법정 설치·관리기준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장비 노후화 문제를 해소해, 보육현장에서 CCTV가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체비 지원에 나



놀고 있는 아이 모습.

/유토이미지

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공시정보시스템 상 CCTV 설치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확인되고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식당·강당 등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를 교체하는 시설이다. CCTV 운영 방식이 '자체 운영'인 어린이집에서 노후 CCTV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전문업체 렌탈 방식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교체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이현진 기자

## 파주시-군부대, 협의 동의율 '역대 최고'

행정위탁 합의각서 체결

파주시가 군부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군사규제 완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최근 관할 군부대와 역대 최대 규모의 협의 실적 이끌어내며 지역 개발의 고질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역대급 규모 행정위탁 확정...건축 인허가 속도감 높여

파주시는 올해 1월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 규모(1.5km<sup>2</sup>)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4년 10월에는 제9보병사단과 축구장 약 700개 면적(5.05km<sup>2</sup>)에 달하는 지역의 행정위탁을 확정하며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 성과를 기록했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시 협의 없이 지자체가 직접 인허가를 처리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법원을 응당리, 파평면 파주큰텐츠월드 산단 일대 등의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인허가 준 작전성 검토 '동의' 비율 역대 최고치(94%) 기록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노력은 수치로도 증명됐다. 시에 따르면 인허가 핵심 절차인 준 작전성 검토 '동의'(조건부 동의 포함) 비율이 2025년 기준 9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80% ▲2023년 82%였던 동의율은 ▲2024년 93% ▲2025년 94%로 최근 2년간 상승했다. 이는 파주시가 관할 사단과 상시 소통 창구를 가동하고, 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1 | 해질 / 18:34

3월

**10일** (화)

음력 : 1월 22일

수도권 날씨

**-7 ~ -9°C**

- 운동 지수 ■■■■■■■■■■
- 빨래 지수 ■■■■■■■■■■
- 세차 지수 ■■■■■■■■■■
- 외출 지수 ■■■■■■■■■■

지역예보: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노르웨이 美대사관 폭발...“테러 가능성 조사 중”  
▲트럼프, 방종 때 지미 라이 석방 요구할 듯... 대중 제재 완화 거론

/사진 뉴시스

▲2월 중국 소비자물가 1.3% ↑ 생산자물가 0.9% ↓... “CPI 상승폭 확대”  
▲日, 말레이에 희토류 채굴 지원... 中의존 탈피 목적

▲“동료라더니 이란 타격엔 침묵”...브릭스 분열에 ‘서방 대항마’ 꿈 흔들  
▲콜롬비아 총선 개시... 페트로 대통령 “투명성·공정선거” 강조